# 국어 순화의 역사와 전망

고성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국어 순화는 해방 이후, 시기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국어학자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로부터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아 온 문제이다. 국어 순화 문제가 실제 언어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언중이 일정 부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언어 정책에 따라 국어 순화 문제가 사회적인 큰 관심사가 되어 거국적인 순화 운동이 전개된 적도 있었고, 순화의 범위를 둘러싸고 학자들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해방 직후와 달리 지금은 영어를 중심으로 한 서양어가 말 그대로 범람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에게는 해방 직후에 일본어 투 단어들을 몰아내고자 했을 때와 같은 절실함도 없고 국어 순화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 크지 않아 국어 순화의 성과는 미미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어 순화의 당위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동안의 국어 순화 경과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고에서는 그동안의 국어 순화 경과를 어휘 분야로 제한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 앞으로 국어 순화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 1. 국어 순화의 경과

국어 순화는 국어에서 잡스러운 것을 없애 순수성을 회복함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어에서 잡스러운 것을 없애는 국어 순화는 어휘뿐만 아니라 발음, 문장, 담화, 맞춤법 등 국어의 전 영역에 걸치는 문제이다(허철구, 1999: 86-87, 민현식, 2002: 207).[1] 그러나 언어의 순화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어휘 차원이고, 또한 국어의 경우에도 해방 이후에 국어 순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중심적인 대상이 된 것은 단어였기 때문에 국어 순화라 하면 으레 어휘 차원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

그런데 국어 순화의 대상을 어휘 차원으로 제한해서 생각하더라도, 국어 순화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적지 않은 견해 차이가 있었다. 해방 후 국어 순화 작업이 시작되던 초창기에는 고유어를 제외한 한자어, 외래어 등을 모두 순화의 대상으로 삼는 극단적인 관점을 취하는 학자들이 있었고, 이에 따라 한자어를 순화 대상어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심각한 논란거리였다. 이 문제는 나아가서 한글 전용이냐 국한 혼용이냐 하는 문제로까지 논란이 번졌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는 고유어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쓰임으로써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외래어들도 국어로 인정하고 아주 문제되는 것만 순화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관점이 보편화되었다. 이는 물

1) 김선철(2009: 6)에서 국어 순화의 내용을 '외래 요소 제거', '쉬운 말 쓰기', '전통 표현 쓰기', '비속어 제거', '표준어 쓰기', '고운 말 쓰기', '청각 인상적 순화'의 일곱 가지로 정리한 것도 같은 내용이라 할 수 있다.

2) 허철구(1999: 86-87)에서는 발음, 표기, 문장 등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국어 순화로 생각하지 않게 된 것은 1976년에 만든 '국어 순화 세칙' 때문이라 하고 있다. 즉, '국어 순화 세칙'에서 "국어 순화는 발음, 어휘, 문법, 맞춤법, 언어 활동들을 포함하되, 어휘의 순화를 먼저 한다."라고 하였고, 이렇게 되면서 주로 어휘의 순화만 특별히 국어 순화라는 이름으로 불려 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로 오해하게 된 것이라 하고 있다.

론 순화 운동 초창기에 문제되었던 일본어, 특히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던 일본어와 우리의 언어 감각에 맞지 않는 일본식 한자어가 거의 사라졌고, 지금은 영어를 중심으로 한 서구 외래어의 영향이 절대적이어서 순화 대상어는 자연스럽게 서구어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 순화 작업을 해 오는 과정에서 전자와 같은 극단적인 관점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이 검증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국어 순화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신라 시대의 향찰 표기나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등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통상적 의미의 국어 순화는 임진왜란 뒤에 선조가 일본말의 사용을 금지한 일을 들 수 있을 것이다(이은정, 1989: 184-185).[3] 그러나 이러한 국어 순화는 일회적인 것이어서 개화기 이후에 이루어진 국어 순화와는 구별되는 점이 있다. 개화기 이후의 국어 순화는 내용상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써 오던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거나 문어와 구어를 일치시키기 위한 운동이었고, 다음은 강제적으로 유입된 일본어나 일본식 한자어나 서구어를 몰아내거나 국어식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그다음의 순화는 물밀듯이 밀려오는 서구의 외국어 혹은 외래어를 좀 더 국어답게 만들고자 하는 운동이었다(박창원, 2005: 209). 1896년 독립신문으로부터 문어체 한자어 축출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1910년대 주시경에 의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주시경에 의해 국어학에 관련되는 학술 용어를 고유어로 바꾸는 작업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순화 운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본격적인 국어 순화 운동이 전개된 것은 해방 이후의 일이다.[4] 해방 이후 초창기의 국어 순화 운동은 일본어나 일본식 한자어를 몰아내는

3) 김민수(1989: 19)에서도 이것을 최초의 국어 순화 운동으로 보고 있다.
4) 해방 이후 국가 기관과 민간단체들의 국어 순화 운동과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현식(2002: 213-220) 참조.

작업부터 시작되었다. 해방이 되면서 잃었던 국어와 국문을 도로 찾았다는 흥분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일본어를 고유어로 바꾸고 한글만 쓰자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던 것이다. 국어와 한글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일로 인식되었으니, 외래어 특히 일본어에서 들어온 말에 대한 민족 감정이 어떠하였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한글이 사용될 수 없었던 시기에도 여전히 사용되던 한자는 외국 문자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생각이 쉽게 자리 잡은 것도 결코 무리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수립되고 추진된 국어 정책이 냉정한 이성과 일정한 거리를 갖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었던 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 의식과 정책이 우리말에서 비교적 단시일 내에 일본어와 일본식 한자어 등을 몰아내는 순기능을 한 것임에 틀림없다. 초창기의 국어 순화 운동은 당시의 문교부가 맡아서 진행했는데, 편수국 산하의 국어정화위원회에서 《우리말 도로 찾기》(1948)라는 소책자를 발간하여 당시에 많이 쓰였던 일본어를 몰아내고 국어를 쓰도록 권장하였다. 이러한 운동은 언론의 호응을 얻었고 또한 많은 지식인의 참여로 상당한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뒤로 계속하여 정부에서는 민간단체의 국어 순화 운동을 도우면서 정부에서도 각종 순화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그러한 운동과 국어 정책을 편 결과 일제 강점기에 스며든 일본어 어휘는 상당 부분 고유어로 바뀌어, 지금은 적어도 일상생활에서 쓰이던 일본어는 거의 다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5] 그러나 건설 현장, 인쇄와 봉제 등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의 언어에는 아직도 일본어의 찌꺼기가 많다. 한편 1970년대부터 생활 양식이 서구화되면서 영어를 비롯한 서구어 어휘도 많이

5) 박창원(2005: 210)에서는 일본어의 흔적을 없애고자 하는 노력이 세 가지 방향에서 나타났음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어휘 자체를 고유어로 대체하는 것이고, 둘째는 고유어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어를 차용하여 대체하는 것이며, 셋째는 일본어의 음절 구조에 맞게 차용된 외래어를 한국어의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교정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용되고 있다. 컴퓨터 용어와 일상생활에서의 서구어를 고유어나 한자어로 바꾸는 순화 자료집을 발간하였지만,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서구어가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근래에는 낯선 외국어의 잡지명, 상호 등이 말 그대로 범람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1984년에 국어연구소가 세워지고, 국어연구소가 1991년에 국립국어연구원(현 국립국어원)으로 승격돼 국어 순화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기관으로서 국어 순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 성과에 대해 후한 평가를 하기는 매우 어렵다. 국립국어연구원(현 국립국어원)이 개원한 이래 2003년 말까지 공식적으로 순화하여 내놓은 말만 해도 21,000여 개가 넘지만[6] 이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일반 국민들 또한 이에 대한 관심이 극히 낮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는 무엇보다 주로 전문어를 대상으로 순화를 했고, 이러한 순화도 몇몇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순화 대상어를 선정하고 순화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어 순화가 몇몇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게 되면 시의적절한 순화 대상어를 선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또한 일반 국민들의 언어 의식에 합치되는 순화어를 마련하지 못할 개연성도 작지 않다. 그리고 순화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전혀 살펴보지도 않은 채 순화어를 대량으로 만들어 일방적으로 보급하는 것은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언어생활을 경직시킬 수밖에 없으며 바라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국립국어원에서 2004년 7월 5일부터 동아일보, 동아닷컴, 케이티(KT)문화재단 등과 함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www.malteo.net)를 마련하여 낯선 외래어나 외국어를 대신할 우

6) 국립국어연구원에서 2003년에 발간한 《국어 순화 자료집 합본》에 실린 전체 단어 수인 21,000여 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 책은 국립국어연구원이 개원한 이래 매년 발간했던 《국어 순화 자료집》을 합하여 발간한 것이다.

리말을 일반 사람들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금까지의 국어 순화 방식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7] 국립국어원이 매주 다듬어 써야 할 외래어나 외국어를 하나씩 선정하여 발표하면 일반 국민이 이 사이트를 통해 해당 외래어나 외국어를 대신할 우리말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이렇게 제안된 말 가운데 몇몇을 추려서 그것을 후보로 투표를 하여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말이 다듬은 말로 최종 선정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러한 순화어 선정 방식은 이전까지의 순화어 선정 방식과는 다르다. 이제까지의 국어 순화가 정부나 전문가 집단에서 주도하는 하향적, 일방적, 타율적인 방식이었다면,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를 통한 국어 순화는 일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상향적, 쌍방향적, 자율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진 순화어는 일반 국민들의 언어 감각에 더 잘 맞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순화어를 자연스럽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순화어의 정착에 보다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8]

## 2. 국어 순화, 어떻게 할 것인가?

국어 순화는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문제였다. 이러한 국민적인 동의는 구체적인 순화 작업을 할 때 순화의 범위 등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이견이 있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국어 순화를 해 올 수 있었던 바탕이 되었다. 지금도 국어 순화의 당위성이나

7)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의 운영 내용 및 성과에 대해서는 박용찬(2005) 참조.
8) 현재까지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를 통해 만들어진 순화어는 280여 개인데, 이들 순화어 중 일반 국민에게 널리 쓰이는 말은 '네티즌'의 순화어인 '누리꾼' 외 한두 개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순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순화어의 정착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좀 더 지켜보아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

필요성에 대해 부인하기는 쉽지 않다. 아직까지 일제 강점기를 경험한 세대가 많은데다가 해방 이후에 시작된 일제 잔재 언어의 청산에 전 국민이 적극적 지지를 보내 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의 사정이 그리 녹록지는 않다. 근래의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를 순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외래어나 외국어의 순화 문제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1970년대까지 순화 운동의 주요 목표였던 일본어 또는 일본어 투 한자어 몰아내기의 경우 전 국민적인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거국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유어로의 순화가 지나쳐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언어 감각에도 맞지 않는 순화어가 만들어짐으로써 오히려 일반 언중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킨 면이 없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어 또는 일본어 투 한자어 몰아내기 이외의 국어 순화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지 못함으로써 국어 순화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된 것도 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 접촉으로 인한 언어 차용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언어 현상이고,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진 현대 사회의 특성을 생각하면 외래어, 외국어 사용은 불가피한 점이 있다. 이들 외국어 중 일부는 우리말에 정착되어 외래어가 되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다. 그러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단어를 외래어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어를 순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근래의 상황을 보면 순화 작업의 성과가 크다고 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하여 순화 작업을 멈출 수도 없고 또한 멈추어서도 안 될 문제이다. 순화 작업을 통해 순화어가 일반 국민들의 언어 감각에도 맞고 바르게

만들어진다면 국민들의 언어 사용은 그만큼 용이해지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어들을 적시에 적절한 우리말로 순화하여 쓰는 것은 너무나 버거운 일이다. 또한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어들 중 상당수는 유행어에 그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순화어를 만들 필요가 없고, 외래어로 정착되기를 기다렸다가 순화어를 만들게 되면 일반 국민들에게 보급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여 익숙해진 외래어 대신 생소한 순화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언어 사용자가 순화어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순화어를 사용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생소한 순화어를 사용하는 것은 당장의 의사소통에 불리하기도 하다.

순화어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것은 순화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순화어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인식은 비표준어나 어문 규범에 어긋난 표기에 대한 인식과는 상당히 다르다. 즉, 비표준어나 어문 규범에 벗어난 표기는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순화어가 올바른 단어이고 순화 대상어는 올바르지 않은 단어라든가 쓰지 말아야 하는 단어라는 인식은 거의 없다.

더욱이 순화 대상어가 잘못된 말이고 순화어가 올바른 말이라 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순화 대상어는 이미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쓰이고 있는 것이어서 오히려 생소한 순화어를 올바른 단어라고 하여 사용하기를 강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그렇고, 관련 기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비록 순화 대상이 되어 순화된 말을 만들 경우에도 일반 어휘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순화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뿐이고,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 것이다. 순화 대상어의 사전 처리 방식 또한 이러한 태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즉 순화 대상어에 대해 뜻풀이만을 하는 경우도 많고, 뜻풀이에 덧붙여

순화어가 무엇인지를 단순히 알려 주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는 비표준어의 경우 '~의 방언'과 같은 형식으로 어느 지역의 방언이고 표준어가 무엇인지를 명시해 줄 뿐 뜻풀이는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표준어를 사용하도록 이끄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근래에 만들어진 많은 순화어 가운데 일상어로 자리 잡은 단어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그동안의 순화 운동 과정에서, 특히 해방 이후 지속적인 순화 운동을 통해 일본어 투 단어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순화어로 대체한 것은 크나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극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지금도 순화어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은 지속적인 순화 작업의 성과임에 틀림없다. 순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성과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순화 작업은 그 실효성이 매우 작다고 하더라도 순화 과정 속에서 일반 국민들은 국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순화 대상어가 있고 그러한 순화 대상어에 대한 순화어가 있다는 사실(순화 대상어에 대한 순화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모른다 하더라도)을 일반 국민들이 안다는 것 자체가 국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달리하게 하는 방편이 된다. 근래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서양 외국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해방 후의 일본어 투 단어들에 대해 가졌던 생각과 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우리말을 살려 써야 한다는 명제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 순화어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씩이라도 듣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봤을 때 순화의 성과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순화 작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국어 순화 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성을 가진 언어 정책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순화 작업을 지속하고자 할 때에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순화 작업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방안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되곤 한다. 정

부의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든가, 지식인과 언론인, 언론 매체가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어야 한다는 것 등은 국어 순화 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지적되는 것이며, 이러한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 그러나 순화 작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근본적인 밑바탕이 되며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국민들의 참여이다. 일반 국민들의 참여가 없다면 어떠한 순화 작업도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둘 수 없다.

해방 이후에 일본어 투 단어들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순화어로 교체된 사실과 그 이후의 순화 작업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창씨개명'을 강요당하고 우리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일제 강점기의 절박한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해방 직후의 우리 국민들로서는 국어에 대한 의식이 남다를 수밖에 없었고, 우리말에 외래 요소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정신이 문제되고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다. 더욱이 일본어와 우리는 특수한 관계에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어라는 외국어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외래어가 아니다. '일제'라는 침략자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밤낮 그 사용을 강요당한 엄연한 외국어다. '일제'는 여기에다가 되도록 우리가 '우리말'을 잊어버리기를 강요했다. 그 결과 우리말은 거의 빈사 상태에까지 도달했었다. 이처럼 정상적인 언어 접촉 과정에서 유입되지 않은 일본어 투 단어들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이들을 우리말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했고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었다. 이러한 위기의식과 공감대의 형성은 자연스럽게 전문가와 언론 매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이것이 1970년대까지의 순화 운동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끌게 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의 개설을 통한 국어 순화 방식의 도입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국어 순화 작업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일반 국민들을 참여시켜 순화 대상어에 대한 순화어를 제안받고, 제안된 순화어를 대상으로 어떤 순화어가 일반 사람들의 언어 감각에 더 맞는 것인지를 조사하여[9] 순화어를 결정하는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사이트'의 국어 순화 방식이 지나치게 대중주의에 치우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언어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들에게 우리의 언어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어 순화를 맡기는 것이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어생활의 당사자가 일반 국민들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국어 순화에서 일반 국민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 것이다.[10] 이것은 일반 국민들을 배제한 채 진행된 1980년대 이후의 순화 작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서 이미 증명되었다 할 수 있다.[11]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를 통한 국민 참여 방식이 올바른 방향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한계는 있다. 1970년대까지의 일본어투 단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과는 달리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

9) 이러한 조사의 필요성은 '복지리'의 순화어인 '복싱건탕'의 예가 잘 보여 준다. '복싱건탕'이 문법적으로 타당성을 가진 순화어이지만, 일반 사람들은 '복맑은탕'이 더 낫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의미상으로 보아도 '복싱건탕'이 '복맑은탕'보다 낫다고 주장할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순화어에 대한 언어 감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순화어 정착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이러한 영향은 부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똑같은 순화어에 대한 자연스러움의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순화어가 일반 국민들의 언어 감각에 맞게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정착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순화어가 정착된 몇 안 되는 예 중의 하나인 '누리꾼(←네티즌)'이 '참살이(←웰빙)'나 '열린장터(←오픈마켓)' 등의 예보다 언어 감각에 더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정착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10) 이에 대한 논의는 박용찬(2005: 49) 참조. 한편, 일반 국민들을 배제한 채 만들어진 순화어가 일반 국민들의 언어 감각에 맞지 않을 가능성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11) 국립국어연구원(현 국립국어원) 등에서 행정, 미술, 봉제 등의 여러 분야에 걸쳐 순화 작업을 하였고 그 결과를 순화 자료집으로 발간해 왔지만, 순화어가 정착된 것은 '둔치(←고수부지)', '갓길(←노견)' 등과 같은 극히 제한적인 예에 불과하다.

서구 외래어의 유입은 언어 접촉 과정에서 생겨난 자연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에 이들을 몰아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없다. 이에 따라 국어 순화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 예전보다 적어졌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국민적인 관심을 끌어내기가 무척 어렵다.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은 쉽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어 순화는 어떤 방식으로든 일반 국민들의 참여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반 국민들의 참여가 비록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그리고 적어도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제안과 투표, 조사가 일반 국민들을 순화 작업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가장 적절한 창구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일반 국민들을 참여시키지 못한다면 순화 작업은 전문적인 영역의 일로서 그 결과가 보고서로 끝나 버리게 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정책 당국은 국민들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 참고 문헌


구본관 · 이혜영(2002), 《남북한어의 공동 순화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연구 보고서.

국립국어연구원(2003), 《국어 순화 자료집 합본》.

김민수(1988), 국어 순화의 현실과 전망, 《국어생활》 제14호, 국어연구소, 4-13.

김민수(1989), 《국어학사의 기본 이해》, 집문당.

김선철(2009), 국어 순화의 개념과 방향 설정에 대하여, 《사회언어학》 제17권 제2호, 1-23.

남영신(2000), 국어 순화 정책 방향 모색, 《21세기의 국어 정책》, 국립국어연구원 · 한국어문진흥회, 83-100.

민현식(2002), 국어 순화 정책의 회고와 전망,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1차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국립국어연구원, 205-251.

박갑수(1977), 국어 순화 운동의 현황과 전망, 《어문연구》 5권 2-3호, 30-33.

박용찬(2005),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의 운영 내용 및 성과, 《새국어생활》 제15권 제1호, 37-57.

박창원(2005), 남북한 공동 언어 순화(1) -순화 대상어의 선정과 순화의 원칙 정립을 위하여, 《Korean 연구와 교육》 창간호, 209-233.

안병희(2000), 국어 문제와 국어 정책, 《21세기의 국어 정책》, 국립국어연구원, 1-12.

이기문(1976), 국어 순화와 외래어의 문제, 《어문연구》 4권 2호, 175-179.

이은정(1989), 국어 순화 운동의 반성, 《새국어교육》 45-1, 184-188.

이정복(2003), 사회언어학에서 본 국어 순화의 문제점, 《사회언어학》 제11권 제2호, 187-214.

최용기(2002), 광복 이후 외래어 투 순화 실태와 문제점,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국립국어연구원, 321-333.

한국교열기자회 편(1982), 《국어 순화의 이론과 실제》, 일지사.

허웅(1977), 국어 순화는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나?, 《민족문화》 11, 125-153.
허철구(1999), 《국어 순화》, 국어문화학교 교재, 국립국어연구원, 84-112.